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전개된 일상 합리화 운동*

- 전시기의 소비 통제와 소비 대중의 국민화 -

권창규*

〈차 례〉

1. 머리말
2. 소비로 귀결되는 일상의 합리화
3. 일상 합리화의 차원에서 소비가 억제되는 양상 (1)
: 근대 계몽기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4. 일상 합리화의 차원에서 소비가 억제되는 양상 (2)
: 전시기를 중심으로
5. 일상의 합리화, 소비 대중의 국민화

【국문초록】

합리성은 근대의 시기와 이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화두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식민지의 형태로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한 한국에서 근대적인 합리성이 일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소비에 주목해서 논의했다. 근대적인 합리성은 소비의 합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토지와 신분으로부터 탈주술화된 인간 해방을 근대적인 합리성의 전제로 볼 때, 이 합리화의 과정은 사람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2012S1A5B5A07037542]

** 연세대학교

들이 소비력으로 해방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소비하는 개인과 소비 대중의 탄생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다양한 민관단체의 계몽운동에서 합리화라는 명목 하에 소비 장려와 소비 억제라는 상반되는 요구가 나타난 것에 주목했다. 일상을 합리화하자는 요구는 생활 개선 운동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소비를 둘러싼 상반된 움직임은 교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대 계몽기부터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특히 1930년대에 들어 국가적인 요구가 뚜렷해졌던 시기, 나아가 전시기(1937~1945)라는 소비 대중의 국민화 요구가 강력했던 시기에 주목해 논의했다.

본 연구는 소비 장려와 소비 규제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소비 일상에 합리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합리성이 개인적인 영역에 확대되는 양상으로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통합하여 생산력으로 통합하려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이는 소비 대중과 국민 대중의 접속 및 긴장/갈등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적인 통치의 차원에서 필요한 규율화된 근대인은 합리적이고 탈주술화된 소비의 무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이를 규제하고 규율하려는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합리성, 소비 대중, 국민, 전시기, 선전(프로파간다), 일상 개선 운동, 소비, 절약, 자본주의

1. 머리말

근대가 지향하는 가치는 합리성으로 집약된다. 합리성이 지닌 해방의 측면과 함께 억압적인 측면은 근대와 탈근대의 논의에서

지속적인 화두로 등장한다. 본 논문은 합리성을 소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대 초기의 한반도에서 합리성이 소비 일상에 전개된 양상을 살피고, 이를 소비 대중의 형성과 국민화 문제와 관련지어 조망하고자 한다. 소비는 2000년대 들어 근대에 대한 미시적, 문화론적인 연구가 활발해진 이후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는데 본 연구는 정치사회적인 담론 및 제도의 차원에서 소비 일상에 접근해서 미시적인 소비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합리론에 대한 논의는 소비 담론의 폭을 넓히는 데 효과적인 틀이 되리라 본다.

근대라는 시기이자 이념을 지배해왔던 합리성은 소비의 합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합리성은 '문화적'이다, '문명적'이다, '과학적'이다, '근대적'이라는 여러 가지 말로 통용되었는데 이 때 합리성의 중심에 소비 행위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지와 신분으로부터 탈주술화된 인간 해방을 근대적인 합리성의 전제로 볼 때, 이 합리화/탈주술화의 과정은 사람들이 소비력으로 해방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상품 및 상품과 교환되는 화폐 앞에서 사람들은 무차별적이고 동등한 개별적인 주체이자 무리로 탄생했다. 사람들은 신분과 혈연에 따라 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비하는 개인으로 분화되어 갔다. 바로 소비하는 개인과 그 무리로서의 대중이 탄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소비력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동시에 강력한 소비의 위계와 질서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에 합리성이라는 명목으로 소비가 장려되기도 하고, 소비가 억제되기도 하는 상반된 양상에 주목한다. 합리화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대중매체(신문과 잡지, 라디오, 영화 등)와 독본(讀本)을 포함한 책자/서적, 전단지(삐라), 연설/강연회와 강습회, 연구회, 운동회와 같은 집회,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폭넓게 전파되었다. 식민지의 행정부와 엘리트(일부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엘리트)가 중심이 되었던 계몽 운동을 보면, 일상

에 대한 관리와 규율의 차원에서 합리화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소비를 장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상을 합리화하자는 요구는 '생활 개선 운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소비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가 교차한다.

생활 개선 운동을 비롯한 일상 합리화에 대한 요구는 합리성이 개인적인 영역에 확대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는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통합하려는 조치들로 소비 대중과 국민 대중의 접속 및 긴장/갈등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합리성이 소비를 통해 관철된다는 점, 나아가 소비하는 개인과 무리가 국민 만들기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다. 식민지의 통치 권력이 필요로 했던 규율화된 근대인은 합리적이고 탈주술화된 소비의 무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이를 규제하고 규율하려는 필요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대 계몽기부터 역사적으로 조망하는데, 특히 1930년대에 들어 국가적인 요구가 강력해지고 1937년 이후 전시기(戰時期)라는 소비 대중의 국민화 요구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 주목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시기는 생산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던 시기인데, 전시기의 주된 경제 담론인 생산력 강화(생산력 담론)와 함께 소비 단속(소비 담론)을 함께 살피는 일은 전시기의 생활 경제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선행 연구를 살피면 식민지 시기의 합리론은 정치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전시기에 대중 동원을 꾀했던 합리적인 체제로서의 과학기술 담론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1], 여기에서 나아가 근대 문학의 지적 토대로서 과학에 접근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2] 합리론이 일상에서 전개된 양상에 주목한 사

1) 대표적인 예로 차승기, 「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보』 23, 2008, pp. 13-46. 김우필 · 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 · 기술 담론에 나타난 근대성」,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pp. 249-280.

2) 대표적으로 황종연 외, 『문학과 과학 1- 자연 문명 전쟁』, 소명출판, 2013.

례로는 정근식의 연구(2006)[3]가 있다. 정근식은 일상에 대한 합리화 요구로서 생활 개선 운동에 주목하여 1930년대에 전개된 합리화론을 1920년대의 생활 개선 운동과 연속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전시기에 들어 군국주의적인 사회 편성의 논리로 전유되었다고 정리했다. 생활 개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노우에 가즈에(2006, 2007)의 연구[4]가 있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생활 개선 운동의 국가주의적인 성격에 천착한 연구로는 김은주의 연구(2012)[5]가 있다. 이 외 전시기의 생활 개선 운동에 초점을 맞춘 오미일의 연구(2011)나 전시기 일상에 대한 연구 성과[6]는 본 논의 중에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 근대를 합리성이 관철되고 분화하는 양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서서 특히 소비를 통해 일상의 합리성이 관철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일상의 합리화라는 요구는 소비를 장려하는 한편 소비를 규율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과 갈등을 빚었다. 이

---

3) 공제욱 · 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p.34.

4)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가 민간 운동(조선일보사의 생활개신운동)을 중점적으로 살핀 연구는 井上和枝,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 中村哲 編, 『1930年代の東アジア經濟-東アジア資本主義形成史 II』, 東京: 日本評論社, 2006, pp. 105-133. 총독부의 생활 개선 운동을 일본과 비교하여 살핀 연구는 이노우에 가즈에, 「1920~1930년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생활 개선 운동」, 나카무라 사토루 · 박섭 외,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pp. 303-347.

5) 김은주, 「1930년대 조선의 농촌 생활 개선 사업과 '국민화' 작업」, 『한국사론』 58, 2012, pp. 147-214.

6)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 개선 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2011, pp. 235-277. 이 외에도 전시기의 일상에 대해 허영란, 이종민, 안태윤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순서대로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2000, pp. 289-330.;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 『동방학지』 124, 2004, pp. 839-881.; 안태윤, 「정책과 현실 사이의 '불온한' 균열」,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pp. 182-205.

갈등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민관 단체가 내놓는 소비의 합리화에 관한 구호가 어떻게 신문과 잡지에서 선전되는지를 살펴 이에 답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소비로 귀결되는 일상의 합리화

근대는 곧 합리성으로 설명된다. 신분과 토지에 예속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근대는 합리성의 이름을 얻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적인 주체들로 분화하는 과정은 상품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상품의 민주주의 때문인데 상품 앞에서는 신분과 성, 민족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반과 상놈이 없고, 남/여의 구별이 없으며,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라는 민족적인 구분이 문제되지 않았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의 형태로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소비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름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로서 물품을 대면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키는데 비단 도시 인구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촌락에도 상품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렸고, 지방 행정 직원과 같은 매개자를 통해 관료주의적인 합리성이 매개, 전달되었으며, 근대적인 농업 시설과 금융 조합이 확대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 할 거 없이 상품에 대한 욕망이 탄생했다는 점이 중요한데, 상품은 가질 수 없어서 문제였지 가질만한 게 아니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상품에 대한 욕망은 근대적인 성공과 입신, 교양과 문화, 건강, 위생과 닿아 있었다. 이들 근대적인 가치들이 상품 소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선전되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 교양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모

두 관련 상품을 통해 학력 자본과 문화 자본, 육체 자본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직접적으로 상업주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했던 광고를 비롯해 미디어를 통한 소비 담론은 새 시대의 가부장으로 등극한 기업의 힘을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라는 가부장과 각축을 벌이면서도 얼마간은 탈주술화된 인간형이 필요했던 근대 국가의 필요도 반영되어 있었다.

일상을 합리화하자는 요구에서 소비 실천은 화두가 되었는데, 합리적인 일상에 대한 요구는 근대 계몽기부터 지식인과 선각자,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총독부가 주도했던 소위 '생활 개선 운동'과 겹치기도 했다. 합리적인 일상에 대한 요구는 생활 개선 운동에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생활 개선 운동은 의식주의 일상을 비롯해 관례와 의례, 시간관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구에 걸쳐 있는데 소비에 대한 항목은 빠지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는 총독부가 주도한 생활 개선 운동과 여러 계몽적인 지식인들과 미디어,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생활 개선 운동이 함께 펼쳐졌다.

그런데 합리화의 요구를 담은 문화생활의 구호는 결국 상품 소비행위로 이어지고 대중적인 상업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는 생활의 문화화와 근대화, 합리화 즉,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흔히 의식주 방면에서 위생과 영양, 효율과 경제를 꾀한다는 말은 모두 상품, 특히 양품(洋品)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새로운' 합리성과 효율성은 기존의 금욕 및 절제의 윤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활의 양풍화(洋風化)가 일상 합리화의 고갱이처럼 여겨졌다.

해리 하르투니언은 생활을 개선하자는 합리화의 구호를 소비와 연결 지어 설명한 바 있다.[7] 그는 192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생

7)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p. 236.

활 개선 운동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생활의 합리화라는 구호가 가정용 상품들의 대량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설명은 일본의 생활 개선 운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1920년대의 생활 개선의 움직임, 특히 총독부가 주도했던 생활 개선 운동은 일본의 생활 개선 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8]

생활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구식 생활로부터 각성하고, 개인적인 생활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이 욕구가 지향하는 방향은 서구식 생활양식이었다.[9] 생활을 <향상/개선/개조/개량/개신>하자는 요구와 각성은 흔히 문화화, 문명화, 근대화, 합리화, 경제화라는 외피를 입었다. 생활을 향상하자는 것은 생활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며 이는 서구식 합리와 능률을 습득하는 일을 의미했다. 근대화는 곧 서구화이자 합리화라고 여겨졌고 서구의 문명적인 가치는 일상에서 상품, 즉 박래품(舶來品)이나 양품의 소비를 통해 수입되고 감각화될 수 있었다.

물론 근대적인 합리성과 소비의 합리성 간의 상관관계는 비단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1920년대의 일본과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생활 개선 운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근대를 시기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넓게 조망해보면, 문화적이며-문명적이고-위생적이며-과학적이고-합리적인 가치는 소비 행위를 통해서 획득된다. 문화인이란 책이나 영화, 음반, 스포츠와 같은 신식 문화 상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사람은 가정 상비 약품을 구매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10] 당대 사람들도 각종

---

8) 이에 대해서는 이노우에의 논의 참고. 이노우에 가즈에, 앞의 논문, pp. 303-347. 김은주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에서 벌어진 생활 개선 운동에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김은주, 앞의 논문, pp. 199-203 참조.

9) 이노우에 가즈에, 같은 논문, p. 310.

10) 이에 대해서는 권창규, 『근대 문화자본의 태동과 소비주체의 형성』, 연세

근대적인 가치들을 상품과 화폐를 통해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길에 나서면 최신 유행식으로 하려고 하고, 집에 들면 현대 문화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신 유행식으로 하려거나 문화식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드는 것입니다.(1936년)[11]

"문화식"이자 "유행식"으로 하는 데는 화폐가 필요하다. 두루마기 대신 양복을, 치마저고리 대신 양장을, 상투와 댕기머리 대신 단발을, 납작 초가 대신 양옥을 선택하며 이에 걸맞은 생활양식과 관습, 스타일과 의식을 수용하는 일은 모두 '개선'과 '개조'의 행위로 일컬어졌다. 합리화의 과정은 많은 재래의 관습을 봉건주의적인 폐습으로 일컬었고, 재래의 관습은 화폐를 통한 소비 행위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비를 통해 합리성은 관철되었다. 합리적인 일상에 대한 요구는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들 소비하는 주체이자 익명의 무리(소비 대중)는 근대의 합리적인 인간상들이었다.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유를 구가하면서 욕망의 주체로 탄생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규율화된 인간형에도 부합하는 존재들이었다.

대학교 박사논문, 2011 참고.

11) 인용 대목은 조선 사람은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一婦人記者, 「消費節約을 徹底實行하라」, 『實生活』, 1936.6, p. 14.(인용문의 밑줄은 필자)

3. 일상 합리화의 차원에서 소비가 억제되는 양상 (1)
: 근대 계몽기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합리적인 일상에 대한 요구는 소비로 귀결되지만, 소비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요구만 있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보면 근검절약과 긴축, 절제, 긴축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았다. 모두 소비를 억압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요청들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대 계몽기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통시적으로 조망한 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전시기의 소비 실천에 대해 살피겠다.

우선 근검절약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덕목이었다. 근대 이전의 사회부터 소박한 물자에 자족하는 가치는 바람직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금욕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에서도 근검절약의 가치는 강조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소위 애국계몽기부터 1910년대 들어 근대적인 신문화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구(舊)관습 개혁 운동 속에서 소비 절약의 덕목은 빠지지 않았다. 식민지 행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매일신보』에는 일찍부터 "절약의 실례(實例)"(1919)[12]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연재되기도 했다.

각종 계몽운동 속에서 소비 절약은 핵심에 있었다. 조선인 민족주의 엘리트가 주도했던 각종 문화운동에서 소비 절약 운동은 풍속 개량의 차원에서 펼쳐졌다. 1920년대 들어 다양한 문화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소비 절약 운동, 절제 운동, 금주 단연(斷煙)

12) 「節約의 實例」, 『每日申報』, 1919.7.24. 3면. 1919년 8월 중순까지 3면에 연재되었다. 매일신보에 이어졌던 소비 절약의 선전의 일례로 「總督府의 節約宣傳」, 『每日申報』, 1922.9.21. 3면.; 「節約의 意義」, 『每日申報』, 1923.9.22. 1면.; 「消費節約」, 『每日申報』, 1925.2.14. 3면.; 「生活樣式을 改善 勤儉力行을 獎勵, 2회」, 『매일신보』. 1935.8.31. 8면.

운동, 허례 폐지 운동이 빠지지 않았다. “방종에서 건실로, 경조(輕佻; 방종)에서 중정(中正; 치우치지 않음)으로 체재(體裁; 형식)에서 실질로, 형식에서 내용으로, 사치에서 질소(質素; 소박)로, 외관에서 실력으로”(1924)[13]라는 구호는 절제와 절약의 덕목을 잘 보여준다. 1920년대 중반 민간단체가 주도한 대표적인 생활 개선 운동인 조선일보사의 ‘생활 개신(改新) 운동’에도 소비 절약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14]

일상 합리화 운동에서 빠지지 않았던 절약, 절제에 대한 요구가 보다 강력하게 등장한 때는 193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는 국가자본주의가 강화되고 경제통제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정치경제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다. 1차 대전을 전후로 합리화의 구호는 ‘산업 합리화’나 ‘경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경제의 차원에서 요청되기 시작했다가[15] 1930년대 들어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1929년 자

13) 「생활 개선에 관한 선언」, 『조선(朝鮮文)』 106, 1924.2, p. 133.(공제욱 · 정근식, 앞의 책, p. 23 재인용).

14) 조선일보사가 주최했던 생활 개신 운동은 색의장려, 건강증진, 상식보급, 소비절약, 허례폐지를 내세웠다(1929). 「생활개신을 선양(宣揚)함 -본사 주최의 신운동」, 『조선일보』, 1929.4.14. 석간 1면. 조선일보사의 생활 개신 운동에 대해서는 井上和枝, 앞의 논문 참고.

15) 1차 대전 후 일시적으로 팽창했던 전쟁 재정을 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경제합리화’, ‘산업합리화’의 구호가 나왔다. (공제욱 · 정근식 편, 앞의 책, p. 29). 각 나라는 어떻게 하면 수급(需給;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것이며, 전시 중에 발흥하였던 각종 산업의 생산설비를 어떻게 하면 전후의 평시체제에서 유지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길야신차(吉野信次, 商工省 工務局長), 「산업합리화의 의의」, 『조선(朝鮮文)』 1930.6, p. 9). 192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산업합리화’, ‘경제합리화’라는 말이 신문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국제 경제 소식을 송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났다. 이후 합리화란 말은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생산의 합리화’, ‘소비의 합리화’를 비롯해 ‘연료의 합리화’, ‘경영 합리화’, ‘운동경기의 합리화’, ‘음식 합리화’(모두 1938년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해서 찾은 말이다.)처럼 별별 합리화가 다 등장했다. 이 중에 운동경기의 합리화는 스포츠의 통제를 일컫는 말이며, 음식 합리화는 요리강습회를 연다는 홍보 문구에 등장한 말이다.

본주의 사상 최악의 공황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이를 해소할 전쟁이 이어지면서 생산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탓이다. 소비는 이제 단순한 소모나 개인적인 소비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속할 필요가 커졌던 것이다.[16]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을 보아도 생산력 향상이라는 문제는 1930년대 초부터 강조되었다. 총독부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농공병진정책, 병참기지정책, 결전경제재편성 정책)은 모두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을 전쟁('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생산력 확충 계획이라 할 수 있다.[17] 경제공황 속에서 "소비생활의 합리화"(1931)[18]는 강조되었고, 이 때 합리화란 단연 절약과 긴축을 가리켰다. "이것도 절약, 저것도 긴축"(1929)[19]한다는 사회 풍조는 만연했다. 따라서 개개인의 소비 행위는 생산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단속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일상 개선 운동은 일상 합리화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 운동도 1930년대 들어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20] 생활 개선 운동은 1920~30년 민간이 주도

16) 공제욱 · 정근식 편, 앞의 책, p. 34.

17)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4, 선인, 2005, 해제(방기중 해제), p.v. 농공병진정책(1931년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宇垣一成)가 1932년부터 추진), 병참기지정책(1936년 부임한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중일전쟁기부터 1938년부터 추진), 1942년부터 결전경제재편성 정책(1942년에 부임한 고이소(小磯國昭) 총독이 태평양전쟁기부터 추진)의 경제 정책은 모두 생산력 향상을 꾀한 정책들이었다.

18) 필자 미상, 「소비생활의 합리화」, 『동아일보』, 1931.1.1. 7면.

19) 이충종, 「긴축정책의 영향-조선인의 각오」, 『신민』 53, 1929.11, p. 80.(황민호, 『식민지시대 자료총서 제 5권, 경제 1』, 계명문화사, 1992, pp. 239-240.)

20) 이노우에 가즈에(「1920~1930년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생활 개선 운동」)

했던 운동에 이어서 1930년대 초부터 전개된 농촌진흥운동('농산어촌진흥운동'), 나아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기, 1941년부터는 '생활신체제'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1932년부터 진행된 농촌진흥운동의 하부 항목으로 추진된 관제 생활 개선 운동은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운동의 국가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흔히 농촌진흥운동은 전시총동원 체제의 예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받는데, 세부적으로는 농촌진흥운동과 함께 '정신작흥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일종의 농촌 안정화 정책으로 추진된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은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관점에서 정신작흥운동을 함께 추진했는데 이는 사회주의를 경계하고 내선융화와 충군애국 관념을 강조하며 지배 체제로의 포섭을 꾀하고자 한 운동이었다.[21]

4. 일상 합리화의 차원에서 소비가 억제되는 양상 (2)
: 전시기를 중심으로

1930년대 초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강화되기 시작했던 국가주의적인 요구는 전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시기는 생산력 확충계획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때이며, 소비 대중에 대한 국민화 요구가 높았던 때이다. 생활 합리화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국가주의적인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개된 총력전(total war) 체제에서는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할 것이 강조되었다.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건설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야 할 (애)국민이 될 것을 요구

와 김은주(「1930년대 조선의 농촌 생활 개선사업과 '국민화' 작업」)의 연구는 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21) 이노우에 가즈에, 같은 논문, pp. 333-334.

받았다.

전시체제에서는 강도 높은 생산 정책[22]은 물론이고 소비를 규제하는, 그러니까 합리화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생산이나 소비는 모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했다. 소비 물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확립된 생산력 확충 계획이 "증산을 통한 동원 수단"이라 하면, 물자 통제 정책은 "내핍(耐乏)을 통한 동원 수단"이라 할 수 있다.[23] 소비 억제는 넓은 범위의 물자 통제 정책(가격 통제, 배급 통제, 물자의 제한이나 회수 나아가 금지의 조치)에 포함되어 있다. 물자 통제는 1937년부터 실시되었다. 물자 통제는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잉여 물자를 전쟁 수요 물자로 동원하고자 한 것"[24]이다. 물자 통제는 생산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 소비를 긴축함으로써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일상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는 때는 일상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이다. 전시체제에서 일상을 쇄신하자는 요구는 강력하게 등장했다. 전시경제체제에서 물가 폭등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사람들은 극도로 피폐한 삶을 감당해야 했다. 전시기에는 통화 증발(增發)로 인해 사람들의 구매력은 확대되지만, 군수 물자에 비해 생활

---

22) 1938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종료되었던 생산력확충계획('생확')은 중요원자재의 대체품을 조선에서 증산해서 일본 경제의 원자재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했다. 1942년부터 시작된 2차 생산력확충계획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물자 동원으로 일본 본토에 의존하던 물자를 자급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본토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p.139, pp. 290-291.

23) 김인호, 같은 책, p. 335.

24) 김인호, 같은 책, p. 336. 1937년 '수출입품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1937.9.)'을 필두로 국가총동원법(1938.5.)은 이 후에 제정된 주요 통제법령(가격등통제령(1939.10.), 물자통제령(1941.12.))의 근거법으로 기능했다. 허영란, 앞의 논문, p. 292.

물자의 생산이 위축되므로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만성적인 전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의 상황에 시달렸다.[25] "물자가 귀해서 못 살겠다", "물건 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26]는 원성은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 신문과 잡지의 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전시기에 사람들의 일상은 불안정했고 식민지의 행정 권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생활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는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총력전으로 결집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쟁('warfare') 준비와 사회복지('welfare')의 연결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일상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 맥락에서 '국민 생활'에 대한 개념도 제시되었다. 개인의 생활을 국민의 생활('국민 생활')로 만들기 나아가 '국민 생활의 전시(戰時) 최적화'에 대한 요구는 신문과 잡지를 가득 채웠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사회학자, 오오코우치 카즈오(大河內一男)은 '국민생활의 이론(國民生活の理論, 1943)'을 썼는데 개인 생활의 논리는 국민 생활의 구조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생활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인 소비 생활과 사회적인 노동 생활을 재-관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버린 체제로 소비경제가 생산력을 방해하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정한 소

25) 사람들은 조세수탈과 강제저축의 방법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재흡수당하는 한편, 만성적인 전시 인플레이션과 절대적인 물자 부족 때문에 극도로 피폐한 삶을 감당해야 했다. 허영란, 같은 논문, p. 289.

26) 은아(隱野), 「가정란 물자절약」, 『시조』, 1939.12, p.27. 식민지시기 잡지에서 발췌한 경제기사 자료집을 참고하면, 「물가 폭등의 이유와 장래」, 「물가 등귀와 국민 생활」, 「물가 앙등의 추세와 대책」, 「물가 문제의 시국적 특징과 그 대책」과 같은 기사가 모두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에 나왔다. 황민호, 『식민지시대 자료총서 제 6권, 경제 2』, 계명문화사, 1992, 목차 참고.

비는 생산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소비 행위의 자유는 규제,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 전쟁기에 소비를 제 2의 생산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강조되었다. 따라서 오오코우치는 국민 생활 논의에서 개인 생활의 축소나 절약과 같은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국가적인 소비 경제의 합리화 및 과학화라는 차원에서 국민 생활의 쇄신이라는 의의를 부여했다.[27]

전시기의 생활론은 <사생활의 국민 생활 만들기>로 집약될 수 있다. 국민 생활에 대한 논의에서 소비는 강력한 억제 대상으로 부각된다. "비상 수단의 생활 방침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곧 물자 절약이다. … 물자 절약은 곧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요,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정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전과 같은 정도로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다.(1939)"[28] 생활을 합리적으로 꾸리는 일, 개선하는 일의 실체는 실제로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이라 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일상은 충분히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소비는 흔히 '낭비', '람비(濫費)'라는 비도덕적이며 비합리적인 행위로 단죄되었으며 절약과 저축의 덕목이 권장되었다.

물자의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생활의 합리화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기반을 둔 소비 억제와 가격 억제, 배급 통제를 의미했다. 가격 억제나 배급 통제와 같은 강력한 소비 억제 정책[29]과 함께 저축도 소비 억제의 한 가지 방책으로 널리 권장되

---

27) 大河內一男, 「生活刷新の社會的意義」(1940), 『大河內一男集 第六卷 國民生活論』, 東京; 勞働旬報社, 1981, pp.205~206. 오오코우치는 종래의 생활 개선 운동이 개인 경제와 사회 생활을 결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고할만한 논문으로 남상호, 「총력전하의 국민생활론과 일상성의 가치화」, 『일본어문학』 32, 2006, pp. 451-480.

28) 은야, 「가정란 물자절약」, pp. 27-28.(밑줄은 필자).

29) 허영란, 앞의 논문, p. 294. 특히 "전시경제통제의 핵심"(같은 책, p. 293)

었다. 물가 통제를 위해서는 전시기의 통화 증발로 확대된 대중의 구매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30] 국민 경제의 차원에서 요구된 저축 행위는 "국민 저축"이라는 수사를 달았다. 저축은 "국민의 의무"(1941)로 선전되었다. 일본이 수립한 저축 목표에 발맞춰 조선에서는 3억 원의 저축 목표가 수립되기도 했다.(1940)[31] "저축심(貯蓄心)"[32]이라는 말도 강조됐는데 생활의 여유가 있건 없건 저축을 하라,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문과 잡지에는 절약은 선이고 소비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흔히 쓰였다.



으로 꼽혔던 배급통제는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꾀하고 소비 억제를 겨냥한 본격적인 조치였다. 허영란, 같은 논문, p. 290.

30) 허영란, 같은 논문, pp. 304-305.

31) 금년 봄 내지에서는 100억 원의 저축이 목표로 수립, 조선에서는 3억 원의 저축 목표를 수립했다. 조선총독부이재과(理財課), 「三億貯蓄の歩み」, 『총동원』, 1940.1, p. 54. 최유리의 책에는 일본과 동시에 '백억저축강조주간'(1939.6.15~6.21)이 실시되었다는 소식도 실려 있다. 저축 장려와 함께 각 단체의 상여금 지급을 국채나 저축 채권으로 대신했다.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p. 114.

32)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독본』, 경성: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선인, 2005, p. 183.)

저축하면 “흥(興)”하고, 낭비하면 “망(亡)”한다는 만화.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국채(國債)를 더 사면 흥성하는 길(오른쪽 그림)이요, 망년회에 신년회며 결혼피로연이다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멸망하는 길(왼쪽 그림)로 설명되어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기관지, 『총동원』(1940.1), 56~57쪽에 실린 삽화다.

전시기에 펼쳐졌던 국민운동(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941년 국민총력운동)은 생활 개선 캠페인의 차원에서 소비 절약을 강조했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전시기에 권장되는 생활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생활 강령이 우후죽순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중 의식주에 관한 항목을 보면 <아껴 입고 아껴 먹으라>로 집약될 만한 것들이었다.[33] 의식주와 의례를 비롯한 생활 혁신은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것”(1938)[34]으로 지적되었다. 생활 개선

33) 일례로 1940년 9월 경기도가 발표했던 ‘전시생활국민생활체제’ 중에서 의식주 및 의례 캠페인을 참고할 수 있다.(「京畿道の通牒, 戰時生活新體制確立へ」, 『경성일보』, 1940.9.8.; 「도민(道民)의 전시생활구체안」, 『매일신보』, 1940.9.8.(오미일, 앞의 논문, p. 257에 인용되어 있다). ① 새 옷을 짓지 말고 국민복을 착용하기, 절연(節煙)과 절주(節酒), 외식과 연회 금지는 모두 아껴 입고 먹으라는 요구에 속한다. 논란이 되었던 ‘백의(白衣)’ 착용 금지에 대해서는 “백의(白衣)는 위대하지만 비효율적인 옷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공제욱의 지적 참고(공제욱, 「의복통제와 ‘국민’ 만들기」, 공제욱 · 정근식 편, 앞의 책, p. 165. 조선시대에도 백의에 대한 금제(禁制)는 있었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백의 금지는 전통사회의 금제와는 분명히 달랐다. 공제욱, 같은 논문, p. 144.) ②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근대의 위생 규율 속에서 과거 건축의 비위생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③ 특히 의례(혼례, 상례, 제례)는 “체면 관념이 허례허식과 부합하야 드디어 자기의 경제생활을 결렬(決裂)시키고 국민경제에 파산을 선고시키는 것”(최창현(崔昌鉉), 「생활 개선의 안목」, 『신민』 창간호, 1925.5, p. 33)으로 지적되었다. “<하처(何處)의 하모(何某)는 자녀 혼인과 부모 연상(連喪)을 경과한 후로 가세(家勢)가 침쇠(沈衰)하얐다고> 한다”(김영범(金永範), 「우리 면(面)농촌의 생활상태」, 『조선(朝鮮文)』 95, 1925.9, p. 67)는 말은 조선 시대의 풍습을 볼 때 과장이 아닐 것이다.

34)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것은 우리의 생활혁신”. 이

운동은 '내선일체'로 집약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일본주의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면서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소비 절약을 강조했던 구호를 보면 그 집단 정서가 흥미롭다. "청산"과 "갱생"(1940), "반성"(1943)이 이들 구호의 주된 정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국민 즉, "신동아(新東亞)의 주인", "세계의 지도자일 일본 국민"[35]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합리', '과학', '문화', '혁신'과 '진보'라는 명목이 부여되었다. "반성", "개오/개조", "각성/청산"과 같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휘는 제국의 국민 되기를 장식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긍정적인 수사의 내용은 신(新)일본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소극적・부정적인 정서에서 적극적・긍정적인 정서로 도약하는 정서적인 화학 반응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전시기에 나왔던 많은 구호들은 선전(프로파간다)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선전에서는 감정을 사실로 키워주고 광기를 엄격한 증거로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36] 선전은 '뜨거운' 감정과 광기("반성", "개오(改悟)"해서 "신일본"의 신화를 꿈꾸자)를 사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과학, 기술, 통계, 능률과 같은 '차가운' 합리로 채워져 있었다.

제국 건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신화, 열정과 광기는 차갑고 엄격해 보이는 수사로 무장해 있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사가 겨냥한 것은 바로 개인주의 소비경제였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제'는 '황금만능주의의 개인 경제'로 '과대 소비의 위험'이 지적되었다.[37] 일상의 소비는 "사생활상의 쓸모없는 것"이며

각종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 경성신민사, 1938.(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p. 49).

35) 직접 인용한 부분은 모두 이각종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 1938(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pp. 49-50).

36) 비합리적인 반응을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들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끄 엘륄, 하태환 역, 『선전』, 대장간, 2012, p. 127.

평시 생활의 구태(舊態)로 치부되었다.[38] 국민생활을 규정하는 행위는 곧 비(非)국민적 행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므로 다양한 비국민들이 생겨났다. 성(남성보다는 여성의 '사치')이나 지역(농촌보다는 도시), 계급(특히 "하이카라 생활"을 하는 "봉급자 계급", "중산계급", "지식계급")별로 비국민은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이들은 '서양풍의 물질 문명에 빠진 사람들'로 "무(無)생산의 소비 계급"[39]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5. 일상의 합리화, 소비 대중의 국민화

'문화적', '문명적', '과학적', '근대적'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변용되는 합리성은 결국 상품 소비를 자극하며 소비로 귀결된다. 소비 행위를 통해 근대적인 합리성은 관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합리화의 명목으로 소비는 억압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비 장려>와 <소비 규제>에 대한 필요가 빚어내는 긴장과 갈등은 근대 계몽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1930년대 초 정치경제적인 상황(공황과 만주 침공)을 거치면서 소비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다가 전시기에 들어서는 소비 규제와 억압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규제는 국가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소비력을 제 2의 생산력으로 전환해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를 독려하는 것이나 소비를 억제하는 것 모두 동일한 '합리화'의 명목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일상 합리화와 과학화, 생활 개선(개조, 개신, 개량)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는

37) 이건혁, 「장기전 하의 대중생활」, 『조광』 32, 1938.6, pp. 32-37.
38)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독본』, 1941(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p. 77, p. 105).
39) 최창현, 「생활 개선의 안목」, 『신민』, 1925.5, pp. 27-33.

권장되기도 했고, 억제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총독부를 비롯해 많은 민관단체가 추진했던 소비 장려와 소비 규제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인의 소비 행위는 생산력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자본주의적인 체제에서 요구되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는 단순한 소모가 아니다.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물품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개인이자 무리들(소비 대중)이 탄생해야 했다. 이들은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체제에서 광고나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계몽 담론을 통해 일정한 구매력으로 훈육되면서 생산력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을 형성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욕구와 소비는 생산력을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 합리성이 요구되는 과정, 곧 합리성이 개인적인 영역에 확대되는 과정은 개인의 욕망과 욕구가 생산력으로 알뜰하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 보드리야르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소비 훈련은 19세기 이래로 산업 체계의 건설을 지배해왔다.[40]

소비 장려나 소비 억압은 모두 소비 행위를 교육하는 일종의 소비자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는 생산자로서 물품을 대면할 수 없는 근대인들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정체성이다. 소비하는 무리는 전근대의 토지와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탈주술화되고 합리화된 존재들로 근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규율화된 인간형에 부합한다.

전시기에는 탈주술화된 소비 대중을 국민화하는 '재주술화' 과정이 강력했던 시기였으며 소비력은 국가의 생산력으로 통합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요구되는 인간형 역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내면화한 유형의 연장선에 있다. 일

40)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00, p. 97.

상은 기획하고 투자하고 계획, 설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강조되며, 이미 구성되어 왔던 식민지 근대의 규율화 기제를 통해 전시 체제의 파시즘적 통제 원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41]

생활을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요구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생활 개선 문제로 파악되었다. "현하(現下)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제(齊)문화 형태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의 생활 개선 문제"[42]가 요구되었다. 전시기에 나왔던 '멸사봉공',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박멸'이라는 대표적인 구호에서 '사(私)'와 '개인', '기/이기(利己)'의 정체는 모두 소비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합리화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많은 선전은 파편화된 개인과 이들로 구성된 무차별적인 대중이 있을 때야 작동할 수 있었다. 전시기에 국민이라는 주술화된 동일체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들, 즉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소비 개인과 그 무리가 탄생한 이후에야 요청될 수 있었다. 사실 소비 일상을 합리화해서 남김없이 생산력으로 통합하고자하는 노력은 산업사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계속되어왔던 원리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결과다.[43]

단, 국민 만들기의 과정은 소비 대중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제국은 이들의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애를 써야 했다. 소비 대중과 국민 대중은 어디서 만나고 어긋날까 하는 물음을 본 연구의

---

41) 일상의 정치화와 대안적인 일상문화의 창출이라는 문제는 생활 개선이라는 압박으로 나타났다.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p. 124.

42) "봉건시대에는 봉건적 사회제도 형태에 요구되는 생활 개선의 문제가 있었고 현하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제문화형태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의 생활 개선 문제가 제창되어 있다", 유비자(有非子), 「생활 개선을 과학의 교시(教示)대로」, 『호남평론』, 1937.2, p. 18.

43)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 관료가 이익을 위해 자본 축적을 직접 촉진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국가의 자본화"로 전환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마르크스 21』 4, 2009, p. 248.

화두에 맞추어 질문한다면, 일상과 욕망을 합리화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일상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소비 대중은 탄생했으며 또한 국민 대중으로 탈바꿈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과 소비를 억압하는 캠페인은 둘 다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서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 문제는 자유로운 소비 개인의 탄생과 이들이 국민화되는 과정과 연결된 문제다. 사람들이 국민화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후속 연구에서 소비 일상을 둘러싼 국민-비국민 되기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약속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독본』, 경성:국민총력조선연맹, 1941.(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선인, 2005.)

길야신차(吉野信次, 商工省 工務局長), 「산업합리화의 의의」, 『조선(朝鮮文)』 1930.6, pp. 5-17.

김영범(金永範), 「우리 면(面)농촌의 생활상태」, 『조선(朝鮮文)』 95, 1925.9, pp. 62-67.

은야(隱野), 「가정란 물자절약」, 『시조(時兆)』, 1939.12, pp. 27-28.

유비자(有非子), 「생활 개선을 과학의 교시(敎示)대로」, 『호남평론』(호남평론사), 1937.2, pp. 18-21.(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제공)

이각종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 경성신민사, 1938(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6, 선인, 2005).

이건혁, 「장기전 하의 대중생활」, 『조광』 32, 1938.6, pp.32~37.

이충종, 「긴축정책의 영향-조선인의 각오」, 『신민』 53, 1929.11, pp. 80-81(황민호, 『植民地時代 資料叢書, 第5卷, 經濟, 1』, pp. 239~240).

一婦人記者, 「消費節約을 徹底實行하라」, 『實生活』, 1936.6, pp. 13-14.

조선총독부이재과(理財課), 「三億貯蓄の步み」, 『총동원』, 1940.1, pp. 54-55.
최창현(崔昌鉉), 「생활 개선의 안목」, 『신민(新民)』 창간호, 1925.5, pp. 27-33.
필자 미상, 「생활개신을 선양(宣揚)함 - 본사 주최의 신운동」, 『조선일보』, 1929.4.14. 석간 1면.
필자 미상, 「소비생활의 합리화」, 『동아일보』, 1931.1.1. 7면.
필자 미상, 「節約의 實例」, 『매일신보』, 1919.7.24. 3면.

2. 논문 및 단행본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권명아, 「전시 동원 체제의 젠더 정치」,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pp. 247-319.
권창규, 『근대 문화자본의 태동과 소비 주체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은주, 「1930년대 조선의 농촌 생활 개선사업과 '국민화' 작업」, 『한국사론』 58, 2012, pp. 147-214.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김우필 · 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 · 기술 담론에 나타난 근대성」,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pp. 249-280.
공제욱 · 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남상호, 「총력전하의 국민생활론과 일상성의 가치화」, 『일본어문학』 32, 2006, pp. 451-480.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4 - 총독부의 경제정책과 전시 생산력확충계획』, 선인, 2005.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 전시총동원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독본』, 선인, 2005.
안태윤, 「정책과 현실 사이의 '불온한' 균열」,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역,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pp. 182-205.

오미일,「총동원체제하 생활 개선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한국독립운동사연구』39, 2011, pp. 235-277.
윤해동,『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2006.
이종민,「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동방학지』124, 2004, pp. 839-881.
차승기,「전시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상허학보』23, 2008, pp. 13-46.
최유리,『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허영란,「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국사관논총』88, 2000, pp. 289-330.
황민호,『(日帝下 雜誌拔萃) 植民地時代 資料叢書, 第5卷, 經濟, 1』, 계명문화사, 1992.
황민호,『(日帝下 雜誌拔萃) 植民地時代 資料叢書, 第6卷, 經濟, 2』, 계명문화사, 1992.
황종연 외,『문학과 과학 1- 자연 문명 전쟁』, 소명출판, 2013.

알렉스 캘리니코스,「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마르크스 21』4, 2009, pp. 241-251.
이노우에 가즈에,「1920~1930년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생활 개선 운동」, 나카무라 사토루・박섭 외,『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2007, pp. 303-347.
자끄 엘륄, 하태환 역,『선전』, 대전; 대장간, 2012.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00.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역,『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大河內一男,『大河內一男集 第六卷 國民生活論』, 東京; 勞働旬報社, 1981.
井上和枝,「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生活改善運動」, 中村哲 編,『1930年代の東アジア經濟-東アジア資本主義形成史 II』, 東京: 日本評論社, 2006, pp. 105-133.

The Rationalization Campaign in Daily Lives in Colonial Korea

- Focusing on Consumption Campaign and the Nationalization of Consumptive Masses in Wartime

Kwon, Chang-Gyu

The western modernity has been defined as rationality. This paper focused on modern rationality in daily consumption. It has been a logical conclusion that people should consume many daily goods to rationalize their everyday lives. On the other hand, cutting down people's consumption has been required of people by the same name of rationalization. This paradoxical phenomenon is not a really paradox but a kind of the same request for being capitalistic men who consume goods systematically. Many aggressive propaganda campaigns against much consumption were adopted from the early 1920's to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The emotional mechanism of propaganda campaigns for making nation(國民) based on consumptive mass was researched in this study.

Key words: modern rationality, consumptive mass, nation, wartime, propaganda, campaign, consumption, everyday lives, capitalism

권창규
소속: 연세대학교 강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206동 1601호
전화번호: 016 792 3250
전자우편: slowgyu@daum.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